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박승렬¹, 한병석^{2*}

¹극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²한양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교수

Analysis of Efficacy of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nd Policy Suggestions

Seung-Ryel Park¹, Byung-Suk Han^{2*}

¹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 FAR EAST University

²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Business Research,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주제어 : 등록금, 장학금, 반값등록금, 취업후상환대출, 인적자본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chieves the policy goal to provide the half-tui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olicy. The study finds that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provides free education for students from under 2nd decile income and the half-tuition for students from under 6th decile. However, since students don't feel fully the effect of the policy,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on new approaches to public communications. Also is suggested the necessity to change the policy tool from debt-like to equity-like investment.

Key Words : Tuition, Scholarship, Student Loan, Income Contingent Loan, Human Capital

1. 서론

2015년 연말부터 '반값등록금 완성'이라는 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등록금 자기 부담 수준이 50%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1].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오히려 이 광고는 '왜 나는 50%가 아니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이

홍보가 사실인가 하는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값등록금 완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간 인식차이가 발생한 사실은 정책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2018년까지 약 23조원 규모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정책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은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인 인적자

*Corresponding Author : Byung-Suk Han(bhan@hanyang.ac.k)

Received October 5,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December 4,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본 육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시사점이 있다[2-7].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의 성과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그간의 연구가 주로 제도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8-10].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장학금의 도입배경 및 개요

2.1 반값등록금의 등장

국가장학금제도의 성과를 논하기 전에 먼저 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학금제도가 필요할 정도로 대학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1956년에 등록금 해결을 위해 매혈을 한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릴 정도로 비싼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논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11]¹⁾.

비싼 등록금은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제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1949년 실시된 농지개혁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농지개혁 대상에서 학교재산은 제외되면서, 많은 사학들이 교육목적보다는 자산보호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대 초에는 대학정원축소정책이 등록금 한도액 철폐와 병행되면서 등록금은 물가상승율의 두배가 넘는 매년 20~30% 수준으로 1980년 중반까지 인상되게 된다. 급격히 인상되는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1978년에는 사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최초로 추진되기도 했는데 예산 문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1980년대 저물가 기조에 영향을 받아 잠시 주춤했던 등록금 문제는 1988년 등록금자율화, 1996년 대학설립자유화 등과 맞물리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는 장학금보다는 대출의 형태로 대응하기 시작하는데 1990년 도입된 무이자대여학

자금, 2005년의 정부보증대출 등의 정책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2006년 들어 1,000만원이 넘는 학비가 등장하면서 등록금 문제는 다시 불거지게 된다. 또한 당시 총선에서는 여야의 등록금 반으로 줄이기와 등록금 후불제 정책이 맞붙으면서 등록금 문제는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논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취업후 상환제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2.2 국가장학금제도 개요

이처럼 대학교육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른바 고등교육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이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각각 약 150%, 200% 높다는 통계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12]. 이는 대학교육의 대중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대학진학률의 폭등으로 나타난다.

Table 1. Rate of Participation in Tertiary Education

Year	'80	'85	'90	'95	'00	'05	'10	'15
Rate(%)	27.2	36.4	33.2	51.4	68.0	82.1	79.0	70.8

Source : Ministry of Education(2018)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3]. 이처럼 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게 되자. 정부는 2011년부터 적극적인 국가재정투입을 통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제도는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 사업으로 통합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08년 이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보다는 성적우수장학금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1)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적자본에 대한 금융지원의 역사(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 저소득층 장학금이 국가장학금으로 통합되고, 그 규모도 확대 되었다. 2013년 이후에도 국가장학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었는데, 2012년도 이후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Yearly National Scholarship Budget(KRW tn)

Year	'12	'13	'14	'15	'16	'17	'18
Budget	1.75	2.77	3.45	3.6	3.65	3.63	3.68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제도는 크게 유형 I 과 유형 II 로 구분이 되는데, 전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대학의 자체장학금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방식이다. 즉 유형 I 은 가계의 소득수준별로 지원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유형 II 는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된다는 차이점이 있다²⁾.

3. 국가장학금 효과성 분석

2015년말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다고 홍보했다. 즉,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을 논의했던 2011년 기준 대학의 총 등록금 14조원 대비 국가장학금 3조9,000억 원과 대학자체노력 3조1,000억 원을 합한 총 7조원이 투입되어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생 및 이해관계자들은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절에서는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소득분위별 등록금 경감률을 분석하였다. 경감율은 정책달성 기준년도 다음해인

2016을 기준으로 각년도별 등록금 총액과 국가장학금과 대학장학금의 합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³⁾.

소득분위별 등록금 경감율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전술한 바와 같이 유형 I 의 경우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되는 소득연계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가장 큰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계층은 소득 2구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등록금 자기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4구간 이하이면서 국·공립대에 재학 중인 경우 역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4구간 이하임에도 사립대 재학생은 등록금의 35% 수준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립대 대비 약 1.8배 높은 수준 때문이다⁴⁾.

결론적으로 국가장학금제도의 주된 도입배경인 저소득층의 학비부담경감이라는 정책목적은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총액 기준으로는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으나, 여전히 개인별로는 특히 중위소득 이상의 중산층 가구에서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는 소득구간 6분위까지는 그 혜택을 실감하도록 제도를 추가 추진하고 있다⁵⁾.

이처럼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을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적자본이 국가적 핵심자원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Table 3. Public Contribution Rate(%) to Tertiary Education by Income Decile

Income Decile	0	1	2	3	4	5	6	7	8	9	10	Avg.
Total Univ.	104.5	97.6	95.0	80.4	69.7	55.4	46.3	38.3	37.2	21.5	23.8	66.4
Public Univ.	125.8	113.1	108.9	104.9	101.6	91.9	79.3	67.9	65.2	38.6	44.5	86.2
Private Univ.	102.4	95.9	93.3	77.5	65.8	50.7	42.1	34.3	33.3	19.1	20.5	63.9

2) 이외에도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지원장학금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연구목적상 이를 통칭하여 국가장학금으로 하였다.

3) 부담경감률(국가장학금 + 국가재원장학금 + 대학교내·외장학금 / 등록금총액)은 345개 대학 10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라는 장학금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특히 대학 자체 노력에 해당되는 국가장학금 유형Ⅱ 역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의 국가, 대학, 학생의 등록금 부담현황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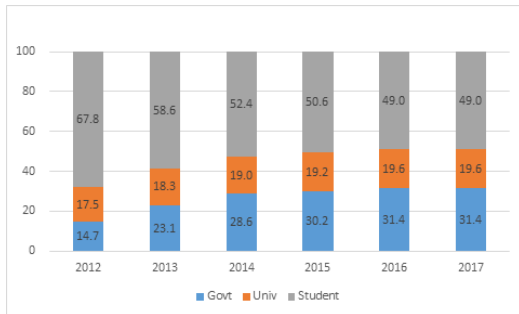


Fig. 1. Composition of Tuition Payer(%)

4.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방안

앞장에서 살펴본 국가장학금의 효과성은 등록금총액 관점에서의 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의 주장대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이행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개인별 특성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값등록금 정책 완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 체감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정책입안자의 관점에서 보면 등록금 고지서 상의 반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대학생 전체의 부담이 반으로 경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별로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부를 수혜 받는 학생과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연간 약 4조원, 누적기준으로는 약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가장학금정책의 성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등록금 체감에 대한 인식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홍보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총등록금을 기준으로, 국민은 나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1년 당시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값등록금 공약은 2006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후 2007년 실시된 대선까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이어졌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반값이라는 선거용 구호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반으로 깎는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정책시행 전에 충분한 방향설정, 소요재원 및 홍보 방향 등의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하나, 이와는 반대로 선거를 거치면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사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를 좁힐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게 되었다. 뒤늦게 정부에서는 반값등록금은 총액 측면의 정책이며, 개인별로는 '소득연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지원은 소득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반값이라는 선거용 구호에 학습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정책당국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별 지원금액을 Table 3과 같이 분명히 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총액적 접근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에 인식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반값지원 대상이 증대되도록 세부계획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에 이러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령인구감소를 고려한다면, 국가장학금이 현재의 예산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는 대상이 증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론적으로

4) 2016년 기준으로 사립대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737만원, 국립대는 421만원으로 나타났다.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립대학 등록금 절반수준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소득구간을 중위소득의 120%인 6구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약 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 인구 및 예산 구조상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 지속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고등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록금을 지출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그 대상자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과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저축)의 개념으로 인식전환하면, 관련된 재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이 비싸다라는 인식은 내가 이 투자를 통해 얼마의 결실을 얻을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투자금이 커질수록 미래의 기대수익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비용에서 투자로의 인식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수반되는 재원은 통상의 지출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점이 충분히 알려진다면, 등록금은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기 위한 투자(저축)이므로 단순히 싸다 또는 비싸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⁶⁾.

마지막으로 현행과 같이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매년 약 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고등교육에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등 늘어나는 사회복지재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총액 기준으로 반값수준에서 유지하고, 나머지 반에 대한 지원방식의 변화 역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 증대와 정부의 재정적 부담 감소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취업후상환대출과 같은 제도를 통해 전술한 나머지 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후상환대출제도는 태생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 되었으므로 미상환율이 높아질수록 결국 무상지원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대출형 지원제도 중심에서 벗어나 주식형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6]7).

투자형제도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재원을 학생에게 지원할 때, 주식거래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생은 미래소득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미래소득을 배당의 형식으로 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식형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대출자에게는 상환 의무로부터의 자유와 정부에게는 더 많은 대출금의 회수라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출제도는 그 속성상 반환의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취업후상환대출을 그 의무를 연기한 것에 해당되는 제도이므로 대출자에게는 상환의무라는 부담을 정부에게는 미상환이라는 부담을 남기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반값등록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투자형 지원제도의 도입은 중고소득층의 가구에도 고등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도입검토가 필요하다.

5. 결론

국가장학금이 처음 시작된 2012년에는 소득 3분위 이하에게만 지원하는 제도였다. 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 장학금(2008년),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2009년)과 같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소득과 연계해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정책이 도입된 이후 약 23조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그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실제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의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 물론 세계적으로 높은 대학진학율이 반증하듯 고등교육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의한 선택이므로 강제적 비용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투자(저축)의 개념을 접목한다면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투자형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었으며, 국립대 학생의 경우는 소득 8분위까지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수혜자인 것이 입증되었다. 반면 사립대 학생의 경우 5분위까지 동 정책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에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체 50%이상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인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선거와 맞물리며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한 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부담 최소화와 정부의 기대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정부재원과 대학자체 노력(등록금 인하, 동결, 교내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지만 소득에 연계하는 이상 그것으로 모든 대학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고는 국가장학금의 성과를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 지원대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를 통해 국가적 장학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Half-tuition policy achieved in 2015* (Press Release, 2015.1.6). <http://www.moe.go.kr>
- [2] Barro, R. J.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407-443.
- [3] Becker, G. S. (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art 2), 9-49.
- [4] Goldin, C., & Katz, L. F. (2001). The legacy of US educational leadership: Notes on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20th century.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8-23.

- [5] Mincer, J. (1981).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 [6]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 [7] B. S. Lee, & O. H. Woo, (2018), Reconstruction of Discourse on Curriculum Reconstruction.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9(6), 9-16.
- [8] B. S. Lee. (2004), *A Study on Korea Tertiary Education System and Policy Suggestions*.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9] Y. S. Ha. (2008), *A Study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and Suggestions to Introduction of IC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10] B. K. Huh. (2003), *A Study on Introduction of National Scholarship*.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11] B. S. Han, & H. G. Kang. (2013). History of Financial Support for Human Capital with Emphasis on Student Aid Policy.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28(3), 45-79.
- [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Yearbook of Employment and Labor Analysis 2017*
- [13]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8*.
- [14]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6*.
- [15]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for 2018 Fiscal Year* (Press Release, 2018.2.6). <http://www.moe.go.kr>
- [16] B. S. Han, & H. G. Kang. (2015). History of Derivatives Contracting on Student Loan.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30(2), 163-183.

박 승 렬(Park, Seung-Ryel)

[정회원]



- 2018년 2월 :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과정수료)
- 2017년 7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고등교육, 행정
- E-Mail : sypark5000@naver.com

한 병 석(Han, Byung-Suk)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6년 6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교수
- 관심분야 : 재무, 고등교육
- E-Mail : bhan@hanyang.ac.kr